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1. 9. 1.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진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1614
- 나. 발 의 자: 임종숙 의원(찬성의원 9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7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 2. 제안이유

성동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신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제7조, 제9조의2, 제12조의2,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제3조의4
-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라.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의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 그리고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원대상과 신고의무 등 (안 제4조 ~ 안 제5조)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가구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요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구에 신고하도록 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신청 등 (안 제6조)**

- 지원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 및 수급자격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함
-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 제6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포상 (안 제8조)**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인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범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신고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해오던 가계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찰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에게는 우선 복지상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지원,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의 지원·연계가 필요합니다.

- 위기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자살 등으로 인한 유가족, 학대 위기 아동,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사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을 발견한 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은 신고 의무자로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과 조사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동작구에서 유일하게 2021.

4. 15 제정하였으며, 유사한 명칭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대구시), 틈새계층 긴급지원(장수군, 진천군),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

안정지원(춘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강동구) 등의 명칭으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sup>1)</sup>

○ 본 조례안은 복지지원 관련법령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인 선택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및 지역복지 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만큼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 됩니다.

---

1)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기가구”로 검색